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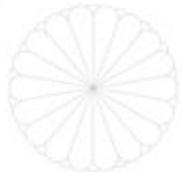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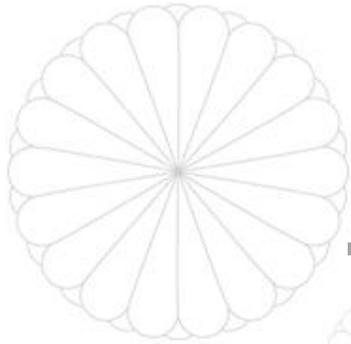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제주도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2017.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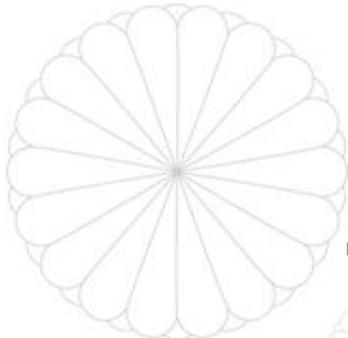
이영웅 사무처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3. 공공갈등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4. 공공갈등 사례2 / 제주 제2공항 건설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
 - ❖ 지방정부는 지역의 최대 고용주면서 최대 소비주체
 - 제주도 전체 공무원 5,300명, 년 예산 4조원으로 제주지역 최대
 - ❖ 지방정부는 지역 정치경제의 중심
 - 각종 세금 징수 및 인·허가 권한, 산하기관 예산 및 인사 권한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 대거 이양
 - 토지, 건물, 주식 등 행정·보존·잡종재산 보유
 -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예산운용 방향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 큰 영향
 - ❖ 공공갈등의 당사자이면서 관리의 주체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1) 제주도 개발정책 갈등

- ❖ 제주도는 국내 최대 관광도시
- ❖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경관자원 보유
-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자본유치에 의한 대규모 개발방식 지향
- ❖ 관광개발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논란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2) 탐동 공유수면 추가매립

- ❖ 제주시내 해안 공유수면 매립지역 추가매립 논란
- ❖ 공유수면 매립 논란일자 신항만 개발(크루즈 관광) 형식으로 논리 전환
- ❖ 대규모 매립지 내 상업시설 조성계획, 기존 항만 활용부재 논란
- ❖ 사업 강행으로 인한 어장피해, 지역공동체 훼손 논란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3) 제주해군기지 건설

- ❖ 국방부(해군)가 남방해역 해상로 보호를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 ❖ 제주도는 인구증가, 경제활성화, 중앙정부의 보상지원 등을 기대하면 찬성
- ❖ 후보지를 서귀포시 화순리, 위미리, 강정동을 거치며 공동체 훼손 심각
- ❖ 절차적 정당성, 주민수용성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한 거센 반발
- ❖ 현재는 정부가 주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구상권(34억원) 청구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4) 한라산 케이블카

- ❖ 제주도과 관광업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추진
- ❖ 탐방객 분산효과로 한라산 보호, 장애인 탐방권 보호 등의 건설 논리
- ❖ 논쟁은 수십 년 지속되어오다가 제주도가 타당성 조사 TFT 구성(2009년)
- ❖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 평가 결과 타당성 없다는 결론 도출
- ❖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식적인 수용입장 거부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5)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 ❖ 클린하우스 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 ❖ 당국은 클린하우스의 넘침 현상, 재활용률 제고, 쓰레기 줄이기 위해 필요주장
- ❖ 10여 년 이어온 배출방식을 바꾸면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없이 시행해 주민반발 커짐
- ❖ 일부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표한 상황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6) 기타 공공갈등 사례

- ❖ 영리병원 도입
- ❖ 관광객 카지노 도입
- ❖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
- ❖ 지하수 공수화 정책(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추진)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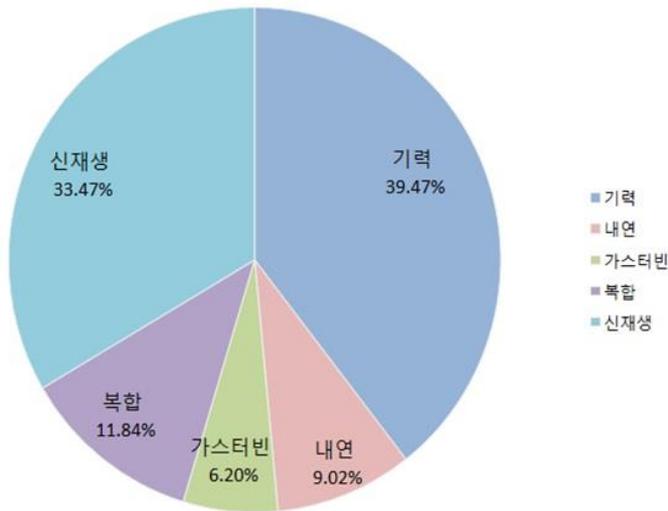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제주도 발전설비의 1/3은 재생가능에너지

[단위:MW]

< 설비별 점유율 [2015.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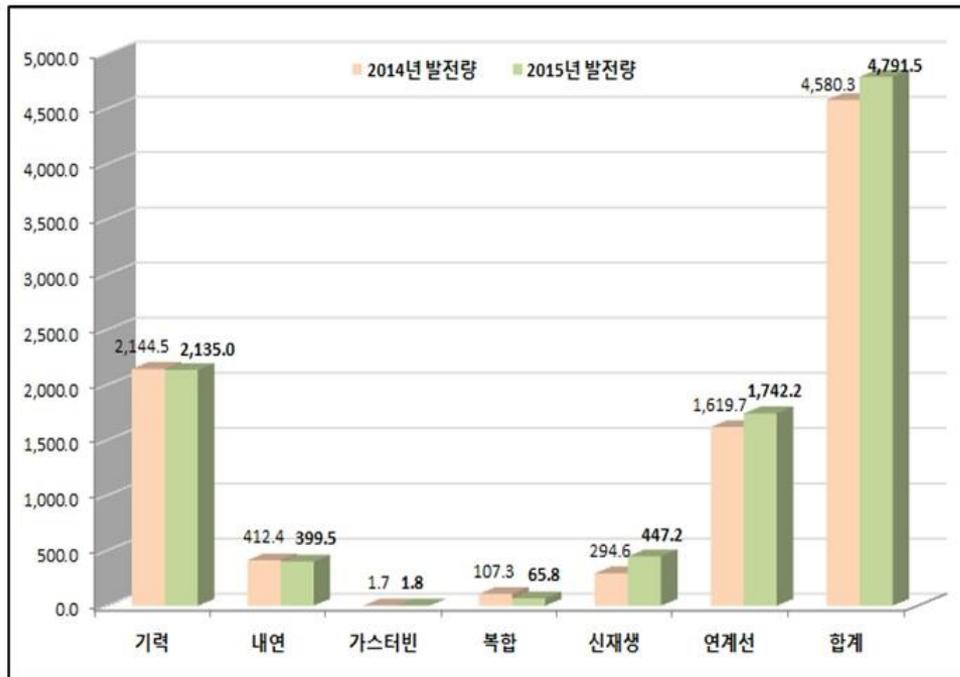


구분		설비 용량	비고
중부 발전	제주기력#2	75.0	
	제주기력#3	75.0	
	제주내연#1	40.0	
	제주내연#2	40.0	
	제주G/T#3	55.0	
	태양광	2.3	
소 계		287.3	
남부 발전	남제주기력#3	100.0	
	남제주기력#4	100.0	
	한림복합	105.0	
	풍력	41.0	
	태양광, 소수력 등	0.3	
소 계		346.3	
기타	신재생	253.2	
합 계		886.8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재생가능에너지, '15년 전체 발전량의 9.3%

[단위: G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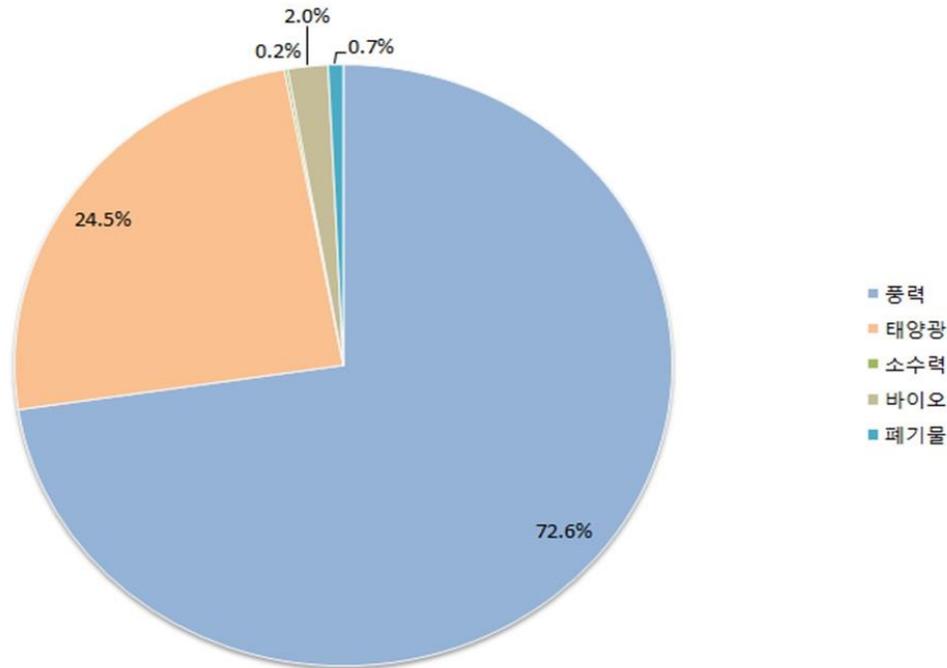


구분	2014년 발전량	2015년 발전량	증가율	2015년 점유율
기력	2,144.5	2,135.0	-0.5	44.6
내연	412.4	399.5	-3.1	8.3
가스터빈	1.7	1.8	1.4	0.0
복합	107.3	65.8	-38.6	1.4
신재생	294.6	447.2	51.8	9.3
연계선	1,619.7	1,742.2	7.6	36.4
합계	4,580.3	4,791.5	4.6	100.0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제주도 재생가능에너지의 73%가 풍력

신재생 에너지원별 점유율



행원풍력발전단지(11.45MW, 제주도, '98~'13)



한경풍력발전단지(21MW, 남부발전, '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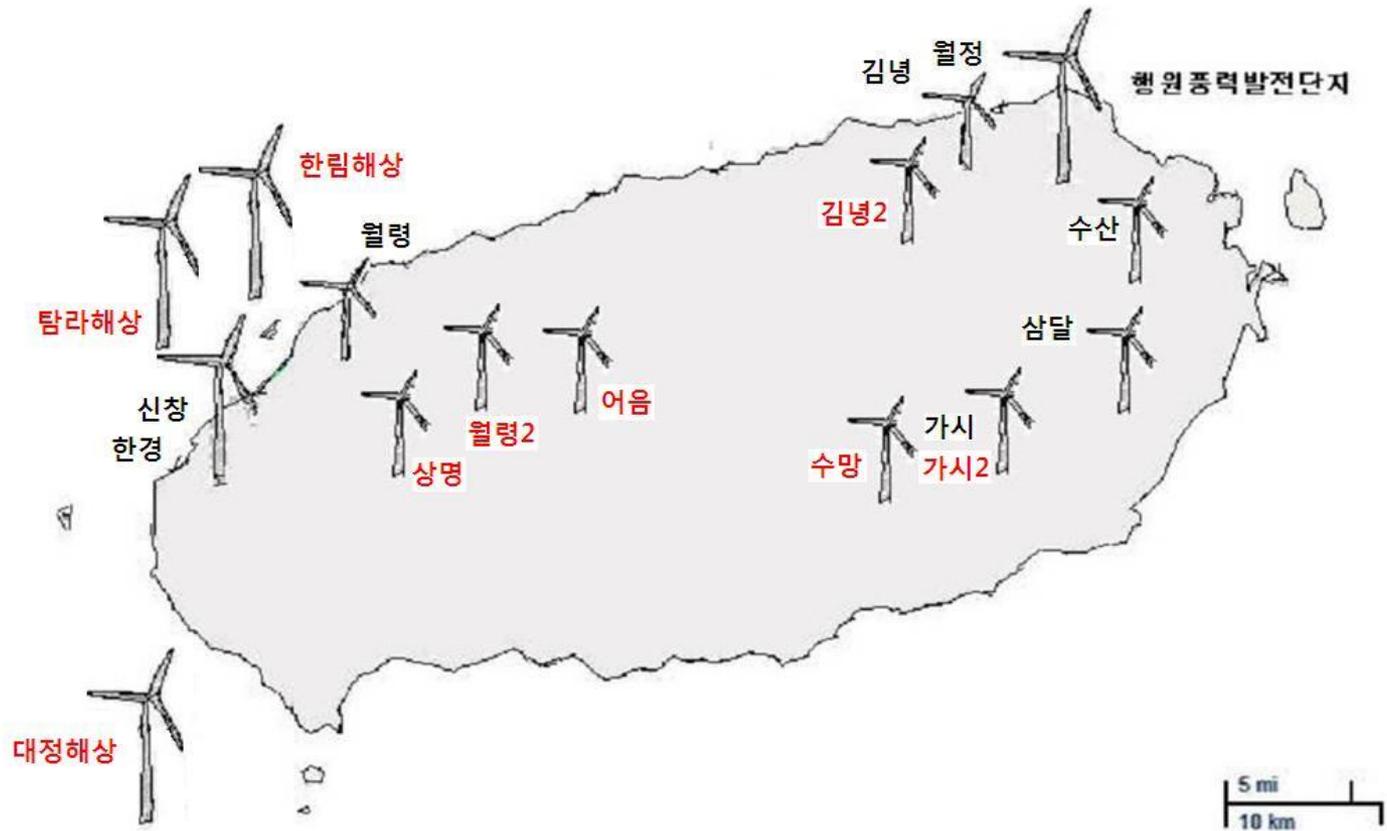
삼달풍력발전단지(33MW, 한신에너지, 2009)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15MW, 제주도, 2012)



향후 제주도 풍력단지 개발계획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2008.05

- '20까지 20%, '50까지 50% 대체
-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

20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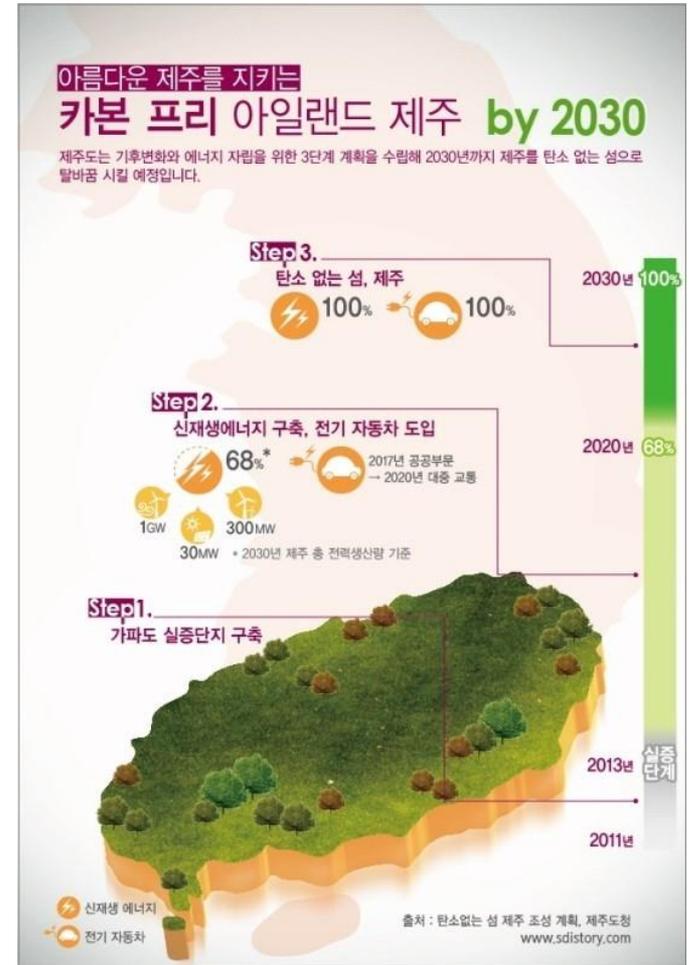
- '30까지 100% 대체
- 풍력 2.3GW, 전기차 100%전환

2015.05

- 道+LG, 글로벌에코플랫폼 제주
- 풍력/전기차 + ESS 1300MW, FC 520MW

2015.12

- COP21, 박근혜 대통령 연설
- 풍력과 전기차로 탄소없는 섬 조성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풍력자원 공유화 논의의 배경

- ❖ 풍력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 반발하면서 주민수용성 대두
- ❖ 2006년 해저케이블 손상으로 제주도 전역 정전사태로 에너지자립 필요성
- ❖ 바람과 제주도민의 역사·문화, 생태적 관계 고려



사회

지하수 이어 바람도 '공유화' 모색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열어

데스크승인 2008.04.24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제주의 바람을 지하수처럼 '공유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3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바람자원 공유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람의 공유화를 모색하게 된 것은 행원풍력단지(제외)를 제외한 제주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민간기업에서 추진되면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주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이날 공유화 배경에 대해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수익금의 지역환원과 에너지 자립 재원확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바람자원 이용료를 제주도 에너지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및 에너지 빈곤해소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에서 다수의 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민간 신청사업만도 250MW 규모에 이르면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공공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어 "공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제주 치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바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풍력발전산 주도가 사업에 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동철 기자>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공유화 전략 : 사용료 징수 + 지방공기업 독점

- ❖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삼다수"(1998~)
 - 제주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
 - 순이익 중 매년 130~150억원 이상 제주도에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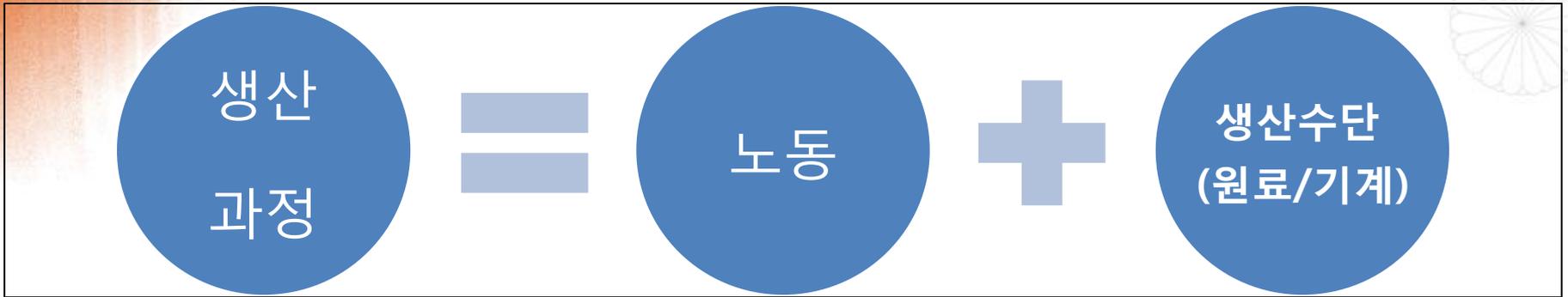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전력판매수입 현황>

풍력단지	구분	설비 용량	투자비(억원)	총매출액(억원)	투자비회수비율
삼달('09~)	민간 기업 (한신에너지)	33MW (10기)	783	725.7	92.7%
한경('04~)	국가공기업 (남부발전)	21MW (9기)	522	690.08	132.3%
성산('08~)	국가공기업 (남부발전)	20MW (10기)	500	488.5	97.7%
행원('03~)	지방공기업 (제주에너지공사)	9.2MW (14기)	320	227.21	71%
신창('06~)	지방공기업 (제주에너지공사)	1.7MW (2기)	33	39.39	119.4%
월령('10~)	민간기업 (주GS E&R)	2MW (1기)	42	54.2	129.0%

풍력발전 초과이익의 원천은?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대정리 SW 4



REPCO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의 결과

- ❖ 관련 법률 마련 : 제주특별법에 근거조항 신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및 조례 제정(2011.)
- ❖ 지방공기업 설립 : 제주에너지공사 출범(2012.07)
- ❖ 풍력자원 사용료 징수 : 신규단지 매출액 7% 기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2016.07)

제주 바람 공공적 관리시동...조례 제정 착수

김성진 기자 sjk3176@hanmail.net 2011년 05월 20일 금요일 10:41 0면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제221조의 5)이 새로 생겨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풍력공유화기금 49억 규모 편성...내년 본격 운용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11.21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 49억원 규모로 편성돼 내년부터 본격 운용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지난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운용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입금 7억원과 기부금 14억원, 전력판매대금 28억원 등 수입계획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기부금은 도내 6곳 풍력발전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의 공유화 협약에 따라 출연한다.

3. 사례1 / 풍력자원 공유화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의 결과

- ❖ 풍력발전 허가 세부기준 마련
- ✓ 지역특성 감안하여 해안선 1km 미만 해역에는 개발사업 제한
- ✓ 사업신청 시 주민수용성 확인 전제(마을총회 회의록 제출 의무화)
- ✓ 제주자연경관 보전 위한 조치 적용(오름 및 주요도로에서 1.2km 이격 의무화)
- ✓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제시 규정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의 분석 (갈등 프레임)

제주도	중앙정부/산업계	환경단체
<p>민자유치, 도민이익 극대화</p>	<p>풍력자원 개발대금 반대 발전허가 기준 강화 반대</p>	<p>공공자금 투자를 통한 공공자원의 공영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자금 필요하므로 에너지공사 직접투자 한계 있다” ○ “에너지공사가 개발권 출자해 지분을 확보하여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할 것” ○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개발이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산업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 ○ “타 지자체에도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 “주민동의, 경관규정 등은 과도한 규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권 금액은 전체 사업비에서 매우 미미하므로 이익환원도 정도에 그칠 것” ○ “민간대자본 투자보다 공공자금을 통해 공공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공공적 이용이다”

정부-道 '풍력 공유화' 충돌...특별자치 특례 무력화되나

산업부 "위헌.위법 소지" 조례 관련 조항 삭제 요구...도 '풍력개발 지속 방안' 입장으로 대응 주목

김현중 기자 | 승인 2017.02.16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제주일보=김현중 기자] 정부가 제주특별법 특례에 근거해 제주지역 풍력개발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위법"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2-12-21 07:29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좋아요

공유



0



트윗



인쇄 | + 확대 | - 축소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법규를 위반한 채 육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 제주김녕풍력발전 허가 심의규정 위반 사실로 드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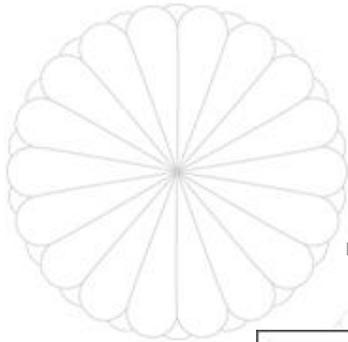
입력 : 2014-01-06 14:52 / 수정 : 2014-01-07 16:07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러
안 의견수렴을 거쳐야한

[쿠키 사회]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
환경연이 문제 삼고 있는 지 않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말 제주도가 사업허가를 내준 제주김녕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심의규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설법인인 제주김녕풍력발전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U-BB+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정한 등급(BB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기준에 들지 못
했다고 밝혔다.



4. 사례2 / 제주 제2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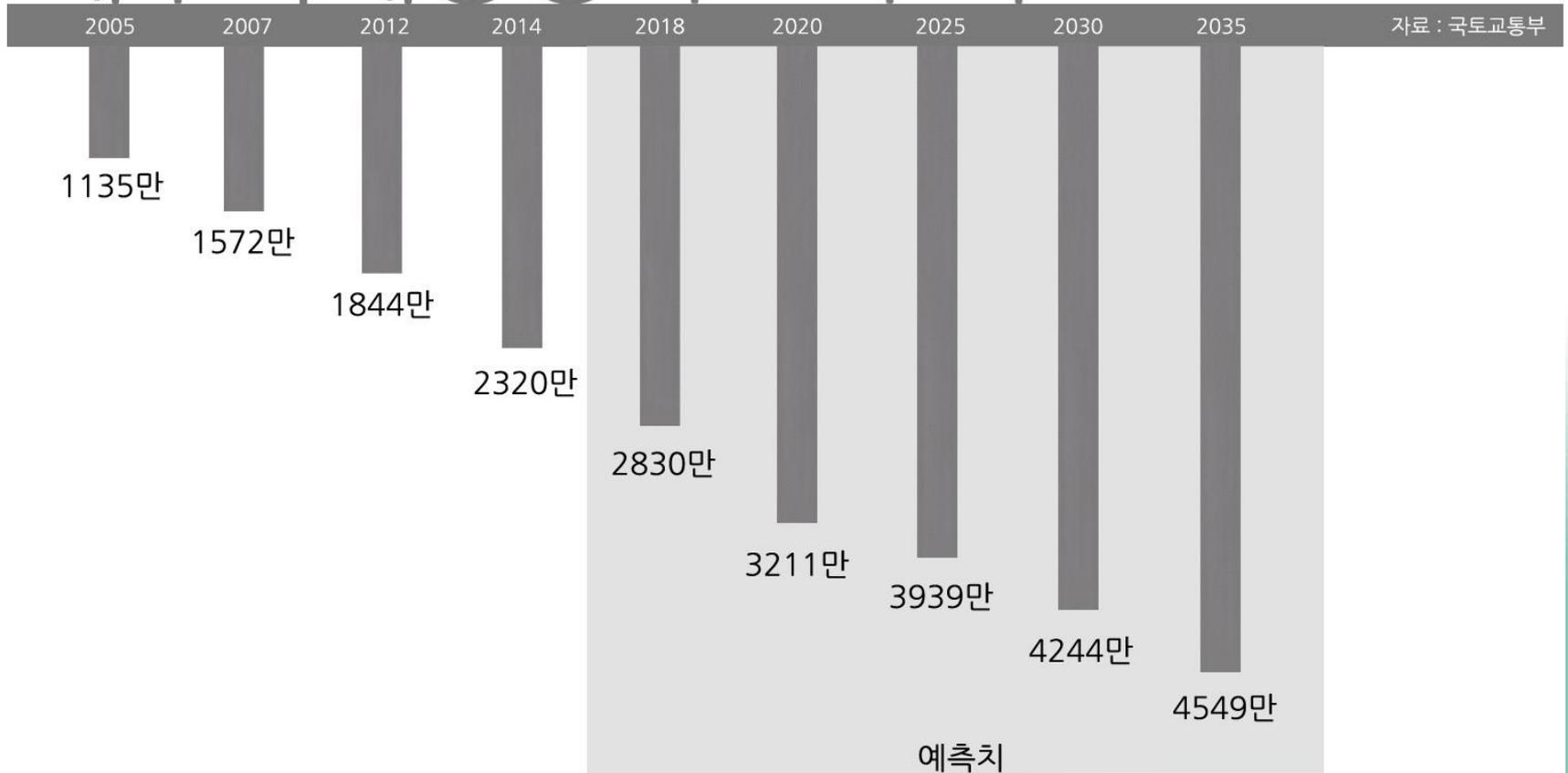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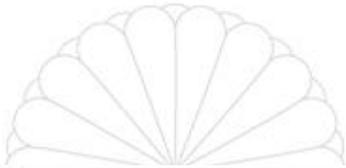
제주공항 포화로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기

- 1990년 4월.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2010년 6월~2012년 4월. 제주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
- 2011년 1월. 제4차 정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고시
-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채택
- 2013년 8월~2014년 9월. 국토교통부,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시행
- 2014년 10월~2015년 11월.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
-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입지, 신산·온평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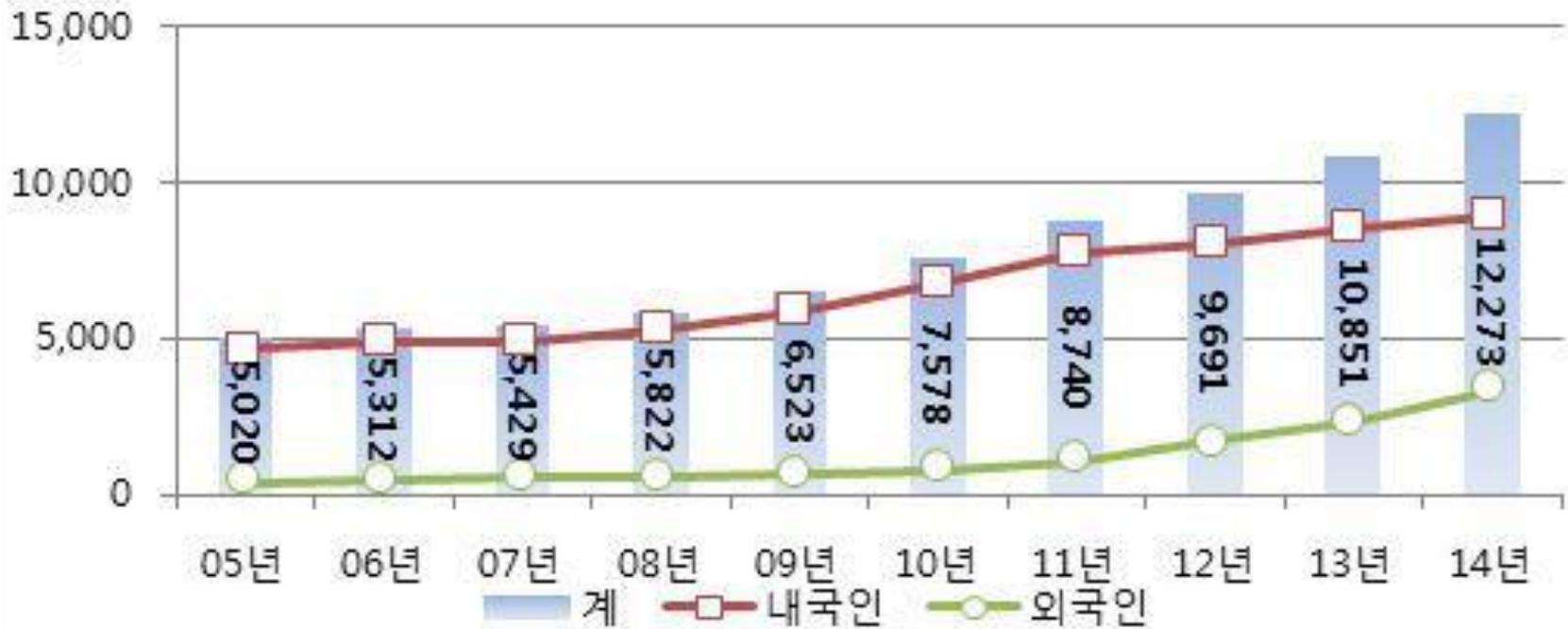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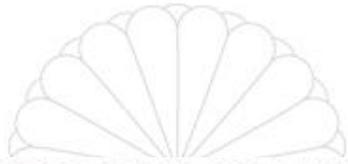
제주국제공항 수요추이





제주시 연도별 관광객 방문 현황 (단위:천명)





제주지역 인구변화 추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년도	세대 수	인구수	인구증가율 (%)
1995	157,314	519,394	0.96
2000	177,600	543,323	0.70
2005	204,635	559,747	0.45
2006	208,424	561,695	0.34
2007	211,850	563,388	0.30
2008	214,681	565,520	0.38
2009	217,711	567,913	0.42
2010	224,713	577,187	1.63
2011	227,873	583,284	1.06
2012	232,141	592,449	1.57



도내 교통수단 (단위 : 대)

자동차 등록대수



렌트카 등록대수



렌트카 교통사고 (단위 : 건)



*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관광객의 급증 요인 :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저비용항공사별 제주 노선 취항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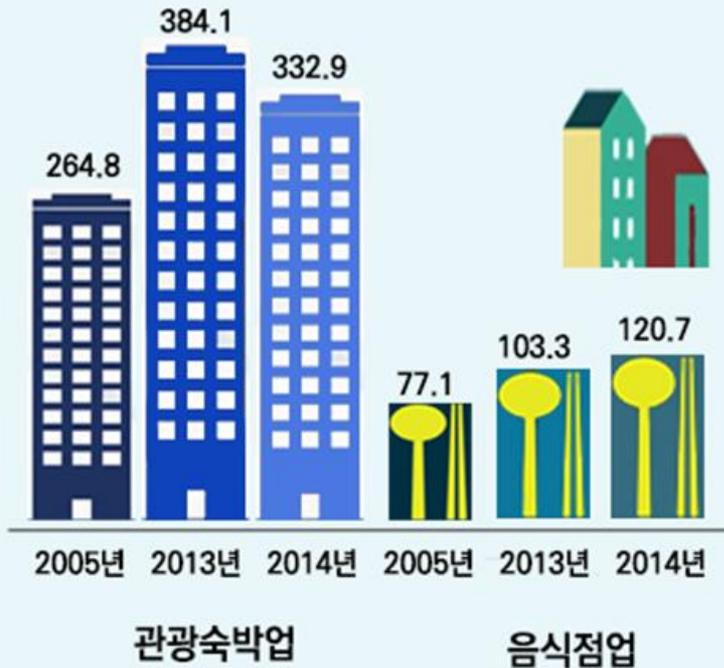
티웨이항공 (전, 한성항공)	2005년 8월 : 청주~제주 노선 취항
제주항공	2006년 6월 5일 : 서울(김포)~제주 취항 2006년 8월 25일 : 제주~부산 취항 2008년 6월 13일 : 청주~제주 취항
진에어	2008년 7월 17일 : 서울(김포) - 제주 취항 2009년 4월 3일 : 부산 - 제주 취항
에어부산	2008년 12월 1일 : 부산~제주 노선 취항
이스타항공	2009년 1월 7일 : 김포 - 제주 노선 취항 2009년 2월 14일 : 군산 - 제주 노선 취항 2009년 6월 12일 : 청주 - 제주 노선 취항

제주공항 포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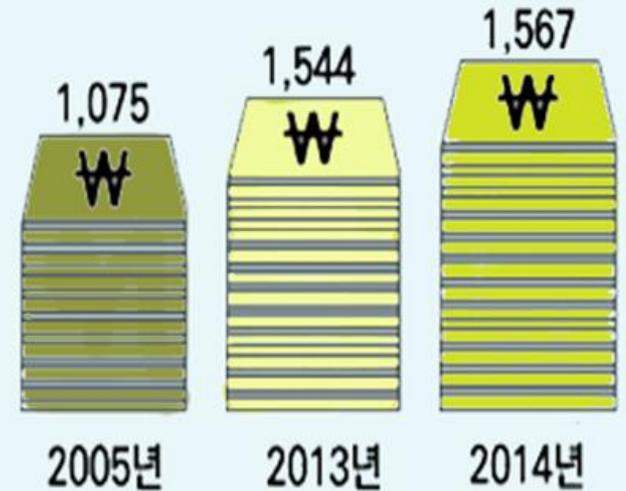
- ❖ 제주공항의 포화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의 포화를 의미함.
- ❖ 포화의 원인은 관광수요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수요관리 중심의 항공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원인이 상존함.
- ❖ 첫째, 저비용항공사의 급증과 항공사들이 수익노선인 제주노선에 집중되면서 활주로 포화
- ❖ 둘째, 중·대형기는 국외노선에 배치하고, 제주노선은 소형기 중심의 다회 운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활주로 과다이용 초래
- ❖ 셋째, 이용률이 낮은 요일과 시간에도 항공사들이 낮은 탑승률로 경쟁적으로 운항하면서 활주로 포화 발생

관광객 증가에 따른 변화와 갈등

주요 관광산업 평균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1인당 개인소득 (단위 : 만 원)



*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단위: 천 원, %)

구분	제주도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2005년	15,230	14,844	10,749	19,112	18,963	11,209
2013년	23,172	23,801	15,442	28,480	28,683	15,865
2014년	23,911	24,901	15,671	29,441	29,670	16,564
'05년 대비 증감률	57.0	67.8	45.8	54.0	56.5	47.8

* 출처 : 통계청 「(2010년 지역소득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한적한 휴양지 제주 옛말 "뽕뽕뽕" 교통지옥

[차고지증명제 두달] 上. 1인당·가구당 차량 보유 전국 1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3-13 15:54 송고 | 2017-03-13 18:29 최종수정

기사보기

네터즌의견

좋아요 공유 0

트윗

카카오

인쇄 | + 확대 | - 축소

편집자주 국제관광도시 제주도가 자동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민 1인당 차량 보유 대수와 가구당 보유 대수 모두 전국 1위로 주차는 전쟁을 방불케한다. 때문에 제주시는 차고지 없이는 신규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올 1월부터 시행중이나 부작용과 주민 불만도 낳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관광객 여러분, 제주서 힐링하시되 쓰레기는 조금만 버립시예"

송고시간 | 2017/01/16 09:00



고경실 제주시장 "쓰레기 문제만 해결된다면 '쓰레기 시장'이라도 좋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관광객 여러분, 제주에서 아름다운 자연 보며 힐링하시되 쓰레기는 조금만 버려주세요."



연합뉴스TV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포화 눈앞...대란 불가피 <제주>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3-11-26 19:17 | 0 | 공감해요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포화 눈앞...대란 불가피 <제주>

제주 하수도 인프라 확충 '비상등'

〈리포트제주〉과부하 걸린 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등 용량 위험수위,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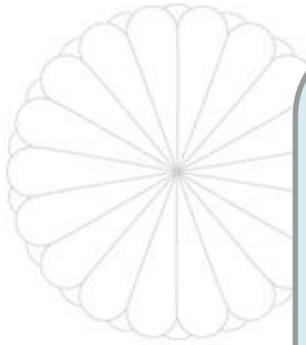
김태형 기자 | 승인 2016.09.11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하수종말처리장 전경 <고기철 기자 haru@jejuilbo.net>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최근 몇 년 새 폭증한 인구와 관광객, 대형건축물 등에 대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제주일보가 보도한 '하수처리도 과부하...증설마저 헉헉(본지 9월 8일자 1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는 하와이(817만명)나 발리(760만명)보다 많은 숫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5. 4. 제주도 방문시)





<해외 경쟁도시와 1인당 관광지출액 및 관광수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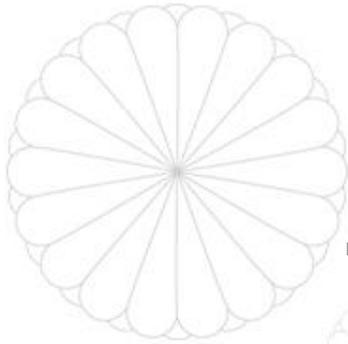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발전연구원 2012. 1. 발표자료(2010년 기준)

제2공항 건설 논란의 갈등 프레임

제주도 / 정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p>관광객 확대유치, 제주 미래발전</p>	<p>생존권 위협 주거환경 악화</p>	<p>적정 수용력 초과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검토 용역결과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주변개발, 확장성, 사업비 등 주요항목 평가 압도적 1위” ○ “제2공항은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 ○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겪어야 하는데 보상 있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용역은 객관성 상실, 허위자료 사용,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신뢰할 수 없어” ○ “타당성 용역의 과업지시서 범위를 넘어 후보지 선정하는 것은 잘못” ○ “농지보상을 받더라도 급등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안착할 수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 선정된 용역에서 공항인프라 확충의 최적 대안 검토 매우 미흡” ○ “제2공항 건설은 제주가 파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변화의 시점이 될 것” ○ “인프라 확충 이전에 제주섬의 적정 수용력을 고려한 수요관리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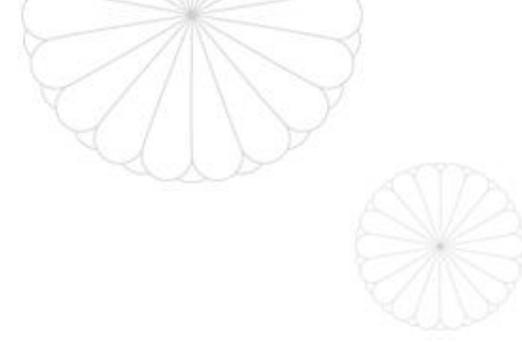
온평제2공항! 땅어는 농민 어디로 가야하나??
온평리청년회





5. 나가는 말

- ❖ 공공갈등의 요인은 부실한 제도의 문제 이전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려는 정책결정자 의지의 문제
- ❖ 정책과정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 보장하는 것이 갈등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 ❖ 참여의 수준이 단순한 의사개진의 정도를 넘어 정책결정의 높은 수준의 참여기회까지 보장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 기대



THANK
YOU